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규제 환경과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결합효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국가 비교 연구

최 종 민*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의 규제 환경과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이 어떠한 조합으로 결합할 때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가 규제 수준 등 개별적인 요인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생태계 관점에 기반을 두어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의 결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의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떠한 조건도 높은 초기 창업활동의 필수조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초기 창업활동은 규제 환경을 포함한 여러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이 다른 방식으로 결합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환경은 독립적인 충분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정·정책지원 환경 및 교육 환경과 결합할 때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비고소득 국가별 분석 결과, 국가의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들이 결합할 때 높은 창업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jmchoi@kmu.ac.kr)

접수일: 2026.05.22. / 심사일: 2026.05.29. / 게재확정일: 2026.06.09.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규제개혁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을 고려한 정책 조합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초기 창업활동, 규제, 기업가정신 생태계, 정책 조합

I. 서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초기 창업활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 확대, 규제개혁, 창업 문화·기업가정신 확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초기 창업활동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창업 활성화가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는 창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규제 환경 개선, 정부 지원, 사회·문화적인 환경, 기업가정신 교육 등 다양한 창업 생태계 조건들을 제시해 왔다. 이 중에서 규제는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창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됐다(김종호, 2008; 김학수, 2010; 이병기·노기범, 2015).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규제 완화 자체가 창업활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국가 발전의 수준, 제도적 역량, 금융의 접근성, 교육·문화적 기반 및 수용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evie & Autio, 2011; de Jong et al., 2020). 즉, 다양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기업가정신 생태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제 환경이 창업에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교육 환경이나 문화적인 수용성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Levie & Autio, 2011),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더

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분하다면 높은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초기 창업활동은 단일의 요인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조건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형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 요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생태계 조건 간 상호 의존성과 다양한 경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규제와 초기 창업활동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신규 창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rdagna & Lusardi, 2009; Klapper et al., 2006). 그러나 기업가정신 생태계 관점의 연구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창업활동이 촉진되지 않으며, 규제 수준 그 자체보다도 정부의 적절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지원, 법·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창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tam, 2015; Spigel, 2017). 이는 초기 창업활동이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조건의 결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의 규제 환경이 다른 생태계 조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할 때 초기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규제 환경이 다양한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조건들과 결합(configuration)할 때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별 초기 창업활동 수준과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을 측정하고 퍼지 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 조합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초기 창업활동이 형성되는 맥락이나 동인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득 국가와 비고소득 국가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Acs et al., 2008). 본 연구는 초기 창업활동 연구에서 단일 변수 중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조건 결합 중심의 접근을 통해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초기 창업활동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초기 창업활동과 기업가정신 생태계

창업활동은 국가의 혁신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윤재, 2005; 김형준 외, 2020; Audretsch et al., 2002; Smith, 2010). 특히, 초기 창업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은 창업 준비 활동과 신규 기업의 활동 단계에 해당하며 한 국가의 혁신 창출, 고용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 및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기 창업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시장에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규모 자체는 작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창업이 활발한 경제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기존 기업 간 경쟁이 강화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이 일어나는 등 시장의 경제적 역동성과 경쟁이 제고된다.

기존 연구는 개인 및 국가 수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활동을 설명해 왔다. 개인 수준의 특성에는 개인의 심리적이고 인적 특성이 창업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좋은 사업 기회로 인지하는지와 창업에 따른 위험과 실패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개인이 창업을 인지하는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불확실성과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려는 성향인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신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기업가정신(entrepreneurial orientation), 교육 수준 등이 있다(윤남수, 2012; 김병윤·양준환, 2025; Crant, 1996; Covin & Slevin, 1989; Krueger et al., 2000).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창업활동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한 역량과 태도 및 동기를 지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제도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창업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를 가진 특정 개인의 선택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내재된(embedded)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 기업가정신 생태계 요소와 산출의 구성개념

개념	구성요소	정의	요소
제도	공식 제도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공식적 규칙과 제도	공식 제도
	비공식 제도	사회의 문화적 맥락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맥락	네트워크
자원	물리적 자원	행위자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	물리적 인프라
	재정적 자원	아직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의 존재	금융
	리더십	집단적 행동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하는 리더십	리더십
	인적 자본	개인이 보유한 기술, 지식 및 경험	인재
	지식	과학적·기술적 지식 창출에 대한 투자	지식
	소비 수단	인구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의 존재	수요
	생산자 서비스	기업의 핵심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중간 서비스 투입 요소	중간서비스
새로운 가치 창출	생산적 기업가정신	경제의 순산출 또는 추가 산출 생산 역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기업이 활동	생산적 기업가정신

자료: Stam & Van de Ven(2021)

이러한 점에서 창업활동을 둘러싼 제도·시장·문화·교육 등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란 기업가적 기회가 탐색, 평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 및 자원이 상호 결합하여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Stam & Van de Ven, 2021).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생태계 안에서는 기업가, 정부, 대학, 투자자, 연구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며 창업과 혁신 활동을 촉진한다. 특히 생산적 기업가정신(productive entrepreneurship)은 경제의 순산출 및 추가적 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핵심 산출로 여겨진다(Baumol, 1993).

기업가정신 생태계 내에서 제도는 공식·비공식적 제도와 사회적인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세제 혜택 등과 같은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는 초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

고 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이중원·김오성, 2023; Shane & Venkataraman, 2000). 또한 문화적 규범이나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 역시 기업가들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여 창업활동을 촉진시킨다(유연호·양동우, 2008; 오해동 외, 2016; 문재희 2020).

자원은 교통·통신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벤처캐피털 투자, 신생기업 투자자, 대출 등의 금융, 개인의 지식과 경험인 인적 자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요소를 의미한다. 물리적 인프라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김소연 외, 2020; 박정선 외, 2020), 금융 자원은 초기 창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창출 이전 단계에서도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강효주 외, 2025; 김상화, 2026). 또한 숙련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지식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창업의 활성화 및 국가의 혁신 역량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양욱·윤현중, 2025).

이러한 배경에서 높은 창업활동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configuration)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국가는 충분한 지원과 자원을 기반으로 높은 초기 창업활동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시장의 개방성과 사회·문화적인 개방성을 통하여 유사한 수준의 창업활동을 형성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생태계는 제도, 금융, 인적 자본, 문화, 네트워크, 시장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Stam & Van de Ven, 2021).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선행연구에서 창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규제 환경¹⁾,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등 다섯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였다(Djankov et al., 2002; Klapper et al., 2006; Shane, 2009; Davidsson & Honig, 2003; Nabi et al., 2017; Arenius & Minniti, 2005; Levie & Autio, 2011).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금융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재정·정책적 환경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초기 창업에 대한 진입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인을

1)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강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단순히 창업 수만을 늘리려는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른 요인과의 결합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hane, 2009). 둘째, 창업교육, 졸업 후 훈련 등을 포함하는 교육 환경이다. 창업자 개인의 역량 형성과 혁신 창업 촉진에 중요한 기반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업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셋째, 인프라 환경은 한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이며 창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문화, 실패에 대한 수용성, 창업의 사회적 정당성 등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화적인 규범인 사회·문화 환경이다. 창업은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낙인이 강한 사회에서는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창업이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창업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김수진 외, 2016).

2. 규제 환경과 초기 창업활동

규제란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기반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최병선, 1992).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Bator, 1958).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독과점과 정보의 비대칭, 부정적 외부효과 등의 문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가 기업의 혁신이나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규제를 비용과 진입장벽으로 이해하며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창업활동 촉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다(김정호·이제영, 2020; Aghion et al, 2023).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인허가 규제 등이 창업하는 데 시장 진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율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등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진욱, 2006; 김종호, 2008; 김학수 2010; 이병기·노기범, 2015). 또한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 환경 가운데서 정부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여 규제하면 창업이나 혁신 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Bailey & Thomas, 2017). 초기 창업활동은 자본과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부담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나 인허가 기간은 창업 준비단계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킨다(김유진, 2022; Djankov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Djankov et al.(2002)은 국가별 창업 진입규제를 비교한 연구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창업절차와 비용이 증가하고 부패와 비공식적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나 제품 품질의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규제 수단을 활용한 과도한 개입은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시키며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저해하며, 따라서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Sunstein, 1990).

반면 규제를 시장에 대한 지원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는 단순한 시장의 제약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기술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주체 간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성태경, 2009).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규제는 이러한 제도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North, 1990). 초기 창업활동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시장 진입 이후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중요한 환경적인 조건이 된다.

규제는 초기 창업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창업의 비용과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반면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장치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창업활동 수준이 단순히 규제의 강도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강한 규제 수준과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혁신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창업활동이 규제라는 단일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어떠한 기업이 생태계 조건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규제가 창업활동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도 창업 친화적인 환경이 결합한다면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되어 창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금융 투자 등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높더라도 일부 충당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와 창업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이 강한 국가에서는 강한 규제라 할지라도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금융이나 교육, 시장 인프라와 같은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면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 환경이 초기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규제에 대한 수준 자체보다도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규제 환경과 다른 생태계 조건과의 결합 효과를 분석하여 규제 환경에 대한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규제 환경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들의 조합이 초기 창업활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전 세계 국가들의 창업활동과 기업가정신을 비교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로 국가 수준의 창업 환경과 개인 수준의 활동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51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통해 분석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변수 간 선형적인 관계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전통적인 계량 분석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을 정량화하고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는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Zadeh, 1965).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각 사례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원자료(raw data)를 집합(set)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보정(calibration)이 필요하다(Ragin, 2014). 구체적으로 각 사례가 특정 조건이나 결과 집합에 어느 정도 속하는지를 0과 1 사이의 퍼지점수로 변환하여 측정하고, 조건 간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여 어떠한 조합이 결과 발생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단일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탐색하기보다는 복수 조건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를 퍼지점수 0과 1 사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완전 소속(full membership), 완전 비소속(full non-membership), 그리고 부분 소속(crossover point)의 세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1과 0은 각각 “절대적인 완전 소속”과 “절대적인 완전 비소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완화된 0.95와 0.05를 사용한다(Ragin, 2008; Thyges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보정 방식을 참고하여 각 변수값의 95%, 50%, 5% 분위수를 기준점(anchor)으로 설정하였으며 95% 분위수는 완전 소속, 50% 분위수는 부분 소속, 5% 분위수는 완전 비소속으로 대응하도록 보정하였다.

보정(calibration) 이후 필요조건 분석(necessary condition analysis)과 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필요조건 분석은 특정 조건이 결과 발생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분석이며, 충분조건 분석은 조건 간의 결합이 결과 발생과 연관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다(Ragin, 2008). 충분조건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각 조건의 존재와 부재를 기준으로 진리표(truth table)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조건과 어느 정도 일관되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때 일관성(consistency)은 특정 조건 또는 조건 조합이 결과조건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값이 클수록 해당 조건 조합이 결과 발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관성 기준(consistency threshold)은 데이터의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Nikou et al., 2024), Ragin(2008)은 일반적으로 0.75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엄격한 충분조건 판단을 위해 0.8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Schneider & Wagemann, 2012; Fiss,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의미 있는 조건 조합의 배제를 방지하고 51개 국가라는 비교적 적은 사례 수에서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Ragin(2008)의 권고 수준을 충족하면서도 충분조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기준을 0.78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례 수를 고려하여 최소 사례 빈도 기준(frequency threshold)은 1로 설정하였다(Ragin, 2017).

충분조건 분석에서는 논리적 잔여를 활용하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해인 복합 해(complex solution), 논리적 잔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간결한 해(parsimonious solution), 연구자가 이론적 방향성과 부합하는 논리적인 잔여만을 활용하는 중간해

(intermediate solution) 등이 도출된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중간해를 중심으로 해석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Ragin, 2008; Schneider & Wagemann, 2012).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Ragin(2014)의 표기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조건의 존재는 원(●, ●)으로, 조건의 부재는 원 안의 ×(⊗, ⊗)로 표시하였다. 큰 원은 간결한 해(parsimonious solution)와 중간 해(intermediate solution) 모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조건(core condition)이며 작은 원은 중간해만 등장하는 주변 조건(peripheral condition)이다. 공란은 해당 조건이 결과 발생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2. 변수측정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의 국가전문가조사(National Expert Survey)는 국가별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도적·환경적 조건에 대한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표를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이론적 구성개념을 대리(proxy)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들은 하나의 구성개념을 대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각 지표가 동일한 잠재 구성개념(latent construct)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특정 지표에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보다는 동일 가중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지표의 특수성보다 국가 수준의 전반적인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과도한 조건 수 증가를 방지하여 분석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조건은 초기 창업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이다. 해당 변수는 대표적인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인구 중 창업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규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는 신규 기업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초기 창업활동은 단순한 기업의 수가 아닌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초기

창업활동 수준을 보여주며, 해당 지표가 혁신의 창출, 고용 확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동성과 활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으로 기업가정신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 관점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제 환경, 재정·정책 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등의 5가지 조건이다. 첫째, 규제 환경은 정부의 자세 및 정부 규제 친화성과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에 대한 조건이다. 해당 조건은 규제 환경은 신규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개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부가 창업 및 기업활동에 부과하는 제도적인 제약요인 또는 진입장벽의 관점으로 정의하였다(Djankov et al., 2002; Klapper et al., 2006).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자세 및 부담 수준(Government Policies: Taxes and Bureaucracy)과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 자유도(Internal Market Burdens or Entry Regulation)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둘째, 재정·정책지원 환경은 창업 및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과 정책적 지원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조건을 의미하는 규제 환경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가정신 생태계 관점에서도 규제와 같은 공식 제도와 금융지원,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Stam & Van de Ven, 2021). 본 연구는 재정·정책지원 환경을 규제 환경과 구분되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투자(equity), 대출(debt), 보조금(grants), 정부지원금(subsidies) 등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창업금융(Entrepreneurial Finance), 정부가 창업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도인 정부 정책의 지원과 중요성(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Relevanc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존재와 수준인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Government Entrepreneurship Programs)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셋째, 교육 환경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창업 관련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제공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는 정도(Entrepreneurial Education at School Stage)와 대학, 직업교육기관, 경영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창업 및 기업 운영 관련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정도(Entrepreneurial Education at Post School Stage)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넷째, 인프라 환경은 창업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신, 교통, 공공서비스, 토지 및 공간 등 물리적 자원에 대한 접근 수준(Physical Infrastructure)과 상업적이고 법률적인 인프라 서비스(Commercial and Legal Infrastructure)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환경은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새로운 사업 방식과 기업가적 행동을 얼마나 장려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환경(Cultural and Social Norms)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개인의 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수용 정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2〉 결과 및 원인 조건

분류	변수	측정
결과 조건	초기 창업활동	· 초기 단계 창업활동(TEA) 총 참여율: 18~64세 인구 중 창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신규 사업체의 소유주 겸 경영자인 사람의 비율
원인 조건	규제 환경	· 조세 및 규제 정책이 신규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얼마나 우호적 인지의 정도 · 신규 기업이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규제 및 진입장벽의 수준
	재정·정책 지원 환경	· 창업 및 중소기업 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수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및 수준
	교육 환경	·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운영 관련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정도
	인프라 환경	· 통신·교통·공공설비 등의 물리적 인프라 접근 수준 · 재산권·상업·회계·법률 서비스 인프라 수준
	사회·문화 환경	· 사회·문화적 규범이 창업 및 새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도

참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https://www.gemconsortium.org/>)

한편 평균값을 활용한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s α)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환경($\alpha=.80$), 재정·정책지원 환경($\alpha=.92$), 교육 환경($\alpha=.77$), 인프라 환경($\alpha=.83$)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

석에서도 각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값이 각각 0.79 이상, 0.88 이상, 0.73 이상, 0.80 이상으로 나타나 단일 요인 중심의 적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분석 결과

1. 필요조건 분석

〈표 3〉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전 각 변수에 대한 보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5% 분위값에 해당하는 조건은 완전 비소속에 가까워지도록 하였으며 50% 분위값은 모호한 교차점으로, 95% 분위값은 완전 소속에 가깝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TEA)의 경우 5.08 이하의 값은 낮은 초기 창업활동 집합에 가까워지도록 하였으며, 11.67은 소속과 비소속 사이의 모호한 교차점으로, 26.72 이상은 높은 초기 창업활동 집합에 속하도록 하였다.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국가별 사례가 해당 조건 집합에 어느 정도 속하는지를 퍼지점수로 변환하였다. 이는 국가별 창업환경의 조건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조건들의 결합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표 3〉 각 변수에 대한 보정 기준

변수		최소	5%	50%	95%	최대
결과조건	초기 창업활동	2.45	5.08	11.67	26.72	33.37
원인조건	규제 환경	2.65	3.04	4.43	6.48	7.00
	재정·정책지원 환경	1.89	2.33	4.17	6.55	7.20
	교육 환경	2.18	2.71	3.76	5.89	6.82
	인프라 환경	3.89	4.58	5.76	7.41	7.47
	사회·문화 환경	2.71	3.16	5.01	7.75	7.99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초기 창업활동은 다른 환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인조건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에서 창업 생태계 조건들이 상호 연계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환경과 재정·정책지원 환경은 모두 정부와 관련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규제 환경은 조세부담, 행정부담, 시장 진입 규제 등의 제도적 제약 측면을 살펴본 반면, 재정·정책지원 환경은 금융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창업 촉진 수단 측면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업가정신 생태계에서도 규제와 정책지원 체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로 본다(Stam & Van de Ven, 2021).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에 대한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의 결합 효과를 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자체가 직접적인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건 간 상관관계가 높으면 서로 다른 조건이 유사한 경험적 사례를 설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조건들과 어떠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건 간 결합과 경로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4〉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1. 초기 창업활동					
2. 규제 환경	-.148				
3. 재정·정책지원 환경	-.192	.902***			
4. 교육 환경	-.016	.713***	.721***		
5. 인프라 환경	-.155	.773***	.699***	.561***	
6. 사회·문화 환경	.113	.548***	.477***	.690***	.502***

〈표 5〉는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필요조건 결과이다. 일관성은 필요조건의 판단기준이며, 포괄성은 해당 조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 범위를 설명하는지를 시사한다. 분석 결과, 모든 조건의 일관성 값이 일반적인 필요조건의 판단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gin, 2008). 즉, 국가의 규제, 재정·정책지원, 교육, 인프라, 사회·문화 환경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도 높은 초기 창업활동의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조건으로 판단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육 환경은 다른 원인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필요조건 분석 결과

변수	일관성(consistency)	포괄성(coverage)
규제 환경	0.59	0.58
재정·정책지원 환경	0.64	0.57
교육 환경	0.68	0.62
인프라 환경	0.64	0.60
사회·문화 환경	0.69	0.65

2.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충분조건 분석 결과

충분조건 분석을 위하여 진리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일관성 기준을 0.78로, 최소 사례 빈도 기준을 1로 설정하였다. 또한 간결한 해(parsimonious solution)와 중간 해(intermediate solution)를 비교하여 핵심조건과 주변조건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7〉은 충분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중간해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 높은 초기 창업활동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경로 1과 경로 2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정책지원 환경과 인프라 환경 수준에서 높은 사회·문화 환경이 결합한 조합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1과 경로 2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정·정책지원 환경과 인프라 환경이 낮은 수준에서 사회·문화환경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1은 교육 환경이, 경로 2는 규제 환경이 추가적으로 낮은 주변조건 수준을 보이는 조합이다. 경로 1과 경로 2는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반드시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이나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을 전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높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renius & Minniti(2005)는 기회에 대한 인식, 자기효능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초기 창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창업활동이 단순한 제도적 조건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프라나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친화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프라나 정부지원, 규제 환경일지라도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경로 3과 경로 4는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이 결합한 조합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3은 규제 환경과 교육 환경이 핵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재정·정책지원 환경이 보조적으로 결합된 가운데 사회·문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의 조합이다. 경로 4는 규제 환경과 교육 환경이 핵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 재정·정책지원 환경이 보조적으로 결합된 가운데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의 조합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창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거나 인프라 수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과 교육 및 훈련 체계가 구축된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부담 완화와 낮은 시장 진입 장벽은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Djankov et al., 2002; Klapper et al., 2006), 교육과 훈련은 개인의 창업역량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Davidsson & Honig, 2003; Nabi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셋째, 경로 5는 교육 환경이 핵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정책지원 환경은 핵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규제 환경과 사회·문화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조합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로는 인프라 환경이 보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창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교육 및 훈련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높은 수준의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 의도와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인적 자본은 제도적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Davidsson & Honig, 2003; Nabi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규제 환경, 재정 및 정책적 지원, 사회·문화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다른 환경조건의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하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해의 설명력은 0.548, 일관성은 0.708로 나타났다. 이는 다섯 가지 경로가 높은 초기 창업활동 사례 전체 중 약 54.8%를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경로의 원 설명력은 비교적 높지만, 상대적으로 순 설명력이 다소 낮다. 이는 각 경로가 설명하는 사례 간에 일정 부분 중첩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로 1과 경로 2는 다른 경로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RI(Proportional Reduction in Inconsistency)를 보이는 반면 경로 3, 경로 4, 경로 5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로 3, 경로 4, 경로 5는 높은 초기 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반대 결과와도 중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탐색적인 결과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충분조건 분석 결과

조건	경로 1	경로 2	경로 3	경로 4	경로 5
규제 환경		⊗	●	●	⊗
재정·정책지원 환경	⊗	⊗	●	●	⊗
교육 환경	⊗		●	●	●
인프라 환경	⊗	⊗		⊗	●
사회·문화 환경	●	●	⊗		⊗
원 설명력(Raw coverage)	0.383	0.410	0.344	0.341	0.323
순설명력(Unique coverage)	0.003	0.027	0.019	0.011	0.012
일관성(Consistency)	0.784	0.777	0.776	0.761	0.784
solution coverage	0.548				
solution consistency	0.708				

고소득 국가와 비고소득 국가를 구분하여 초기 창업활동에 미치는 조건 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구분을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2024년 GNI per capita를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 집단(high-income economies)과 비고소득 국가 집단(non-high income economies)을 분류하였으며, 각각 33개국과 18개국으로 분류되었다. 〈표 8〉은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고소득 국가와 비고소득 국가의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고소득 국가집단에서는 규제 환경과 재정·정책지원 환경, 사회·문화 환경이 높은 수준이며 인프라 환경이 핵심적으로 낮은 가운데 교육 환경이 주변적으로 결합된 조합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과 정책지원 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

화적 환경이 결합하면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기회 추구형 창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이러한 창업활동은 경제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제도권 내에서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Levie & Autio, 2011; Boudreaux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안정된 제도권 안에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결합할 때 높은 초기 창업 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다만,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인프라 환경의 부재는 절대적인 의미의 인프라 부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소속 정도를 의미하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비고소득 국가집단에서는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의 부재가 대부분의 경로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로 1에서는 재정·정책지원 환경과 교육 환경의 부재가 핵심조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2와 경로 3에서는 재정·정책지원 환경과 인프라 환경의 부재가 핵심조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주변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4에서는 교육 환경과 인프라 환경의 부재가 핵심적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환경과 재정·정책지원 환경이 주변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비고소득 국가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낮은 소득 수준, 실업 회피, 생계유지 목적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창업률이 높더라도 반드시 혁신적이거나 생산적인 창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Wennekers et al., 2005; Acs et al., 2008).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과 함께 나타난 높은 초기 창업 활동은 생계유지 목적의 창업이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변수는 창업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고소득 국가에서의 높은 초기 창업활동 반드시 우수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합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사회·문화 환경의 결합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지만, 비고소득 국가에서는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도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초기 창업활동이 형성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며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반드시 동일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기보다는 국가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초기 창업활동에 대한 충분조건 분석 결과: 고소득·비고소득 국가 비교

조건	고소득 국가	비고소득 국가			
	경로 1	경로 1	경로 2	경로3	경로4
규제 환경	●	⊗		⊗	●
재정·정책지원 환경	●	⊗	⊗	⊗	●
교육 환경	●	⊗	⊗		⊗
인프라 환경	⊗		⊗	⊗	⊗
사회·문화 환경	●		●	●	⊗
원 설명력(Raw coverage)	0.410	0.618	0.416	0.455	0.222
순설명력(Unique coverage)	0.410	0.196	0.017	0.061	0.019
일관성(Consistency)	0.812	0.864	0.848	0.855	0.852
solution coverage	0.410	0.721			
solution consistency	0.812	0.837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규제 환경과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다양한 조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할 때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의 초기 창업활동과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간의 관계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환경, 재정·정책 지원,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모두 높은 초기 창업활동의 필수조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창업활동이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됨을 시사한다.

충분조건 분석 결과, 높은 초기 창업활동은 다양한 조건 조합을 통해 나타났다. 일부 경로에서는 사회·문화 환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경로에서는 교육 환경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규제 환경과 재정·정책지원 환경의 결합할 때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환경이 다른 환경적인 조건의 부족함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 역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수준의 초기 창업활동이더라도 동일한 경로가 아닌 국가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반드시 유사한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규제 환경이 초기 창업활동과 단순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는 규제를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보거나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보는 상충된 시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규제 환경 그 자체로는 초기 창업활동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이나 독립적인 충분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건들과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존재할지라도 교육 환경이나 사회·문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높은 초기 창업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생태계 조건들과의 결합을 통해 높은 초기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규제 환경이 한 국가 내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다른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소득·비고소득 국가집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초기 창업활동

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차이를 보이며 높은 설명력과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고소득 국가 집단에서는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사회·문화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단일의 경로가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창업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높은 수준의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비고소득 국가에서는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의 부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고소득 국가의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반드시 견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정책 조합(policy mix)의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규제 환경, 재정·정책지원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환경, 사회·문화 환경 등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때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되었다. 즉, 규제 완화, 금융지원,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창업문화 확산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one-size fits all) 정책이나 타 국가의 단순 벤치마킹이 아니라, 국가별 조건에 맞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규제개혁과 정책지원, 사회·문화 환경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 비고소득 국가에서는 단순한 창업률 제고보다는 창업의 지속 가능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역시 단순한 숫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높은 초기 창업활동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규제 환경만으로는 높은 초기 창업활동을 설명할 수 없음도 보여주었다. 규제개혁은 여러 기업가정신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 등 사회·문화적인 인식과 환경에 대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Schüler, 2023), 단순한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 확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적 기반 구축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정책의 평가 역시 단순한 창업률이나 창업기업 수의 증가 여부를 넘어 유형과 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히,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창업활동의 동기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양적인 확대만으로 창업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고소득 국가의 경우 제도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조합에서도 높은 초기 창업활동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창업정책의 성과평가는 창업 생태계의 질적 수준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국가별 초기 창업 활동 수준의 변화 과정이나 규제 환경 및 생태계 조건의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정 시점의 분석은 조건들의 동태적인 변화와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분석을 수행하여 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초기 창업활동은 경제성장 수준, 노동시장의 구조, 사회보장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 제도적인 특성과 정책 변화 과정을 고려한 비교 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창업활동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표본 분석의 해법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이 다소 낮아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효주, 박상욱, 이수현, & 이광배. (2025). 창업기업의 성장주기별 특성 및 성장요인 분석: 2024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학혁신연구』, 4(4), 93-106.
- 김병윤, & 양준환. (2025). 창업교육이 고등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40(4), 211-230.
- 김상화. (2026). 창업지원정책 인식이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12(1), 249-256.
- 김소연, 조민경, & 이무원. (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47-65.
- 김수진, 한정화, & 이상명. (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양욱, & 윤현중. (2025). 과학기술인재의 연구개발활동과 창업의도: 고용가능성과 기술적 기회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8(4), 241-279.
- 김유진. (2022).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4), 1-16.
- 김정호, & 이제영. (2020). 혁신 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 특성, 기업 연령대, 제조업 내 산업 유형의 조건부 효과. 『한국혁신학회지』, 15(3), 29-58.
- 김종호. (2008).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규제연구, 17(2), 27-46.
- 김학수. (2010). 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9(2), 45-73.
- 김형준, 민태기, 왕정복, & 오근엽. (2020). 국가 특성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벤처창업연구』, 15(6), 55-65.
- 문재희. (2020). ICT 문화 환경이 아이디어창업과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20(3), 65-74.
- 박정선, 박상혁, & 홍성신. (2020). 판교테크노벨리의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연구. 『벤처창업연구』, 15(1), 71-94.
- 성태경. (2009).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조기업과 서비스

- 기업의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2(2), 761-782.
- 오해동, 최지연, & 노전표. (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흡스테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 유연호, & 양동우. (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 윤남수. (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이병기, & 노기범. (2015).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규제연구, 24(1), 51-81.
- 이운재. (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18(2), 653-671.
- 이중원, & 김오성. (2023). 창업가의 자원과 정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장변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 125-165.
- 최진욱. (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5(1), 3-25.

- Acs, Z. J., Desai, S., & Hessels, J. (2008). Entrepreneurship,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31(3), 219-234.
- Aghion, P., Bergeaud, A., & Van Reenen, J. (2023). The impact of regulation on innov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13(11), 2894-2936.
- Ardagna, S., & Lusardi, A. (2009). Where does regulation hurt? Evidence from new businesses across countries (No. w1474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renius, P., & Minniti, M. (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udretsch, D. B., Thurik, A. R., Verheul, I., & Wennekers, A. R. M. (2002).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and Policy in a European-US Comparison*. Boston/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ailey, J. B., & Thomas, D. W. (2017). Regulating away competition: The effect

- of regul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52(3), 237-254.
- Bator, F. M. (1958). The Anatomy of Market Fail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2(3), 351-379.
- Baumol, W. J. (1993).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of Payoffs*. Cambridge, MA: MIT Press.
- Boudreaux, C. J., Nikolaev, B. N., & Klein, P. (2019). Socio-cognitive traits and entrepreneurship: Th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1), 178-196.
- Covin, J. G., & Slevin, D. P.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avidsson, P., & Honig, B. (2003).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among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01-331.
-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 Shleifer, A. (2002).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 1-37.
- de Jong, A., Rietveld, C. A., & van Stel, A.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y Regulation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Revisited. *International Review of Entrepreneurship*, 18(3).
- Fiss, P. C. (2011). Building better causal theories: A fuzzy set approach to typologies in organization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2), 393-420.
- Klapper, L., Laeven, L., & Rajan, R. (2006). Entry regulation as a barrier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2(3), 591-629.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vie, J., & Autio, E. (2011). Regulatory burden, rule of law, and entry of strategic entrepreneurs: An international pane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8(6), 1392-1419.
- Nabi, G., Liñán, F., Fayolle, A., Krueger, N., & Walmsley, A. (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6(2), 277-299.
- Nikou, S., Mezei, J., Liguori, E. W., & El Tarabishy, A. (2024). FsQCA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62(3), 1531-1548.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C. (2014).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gin, C. C. (2017). *User's Guide to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 Schneider, C. Q., & Wagemann, C. (2012). *Set-theoretic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 guide to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üler, D. (2023). Institutional change and entrepreneurship as occupational choice—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21(3), 385-439.
- Shane, S. (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 141-149.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mith, D. (2010).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growth. *Undergraduate Economic Review*, 6(1).
- Spigel, B. (2017).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49-72.
- Stam, E. (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Stam, E., & Van de Ven, A. (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2), 809-832.
- Sunstein, C. R. (1990). *After the Rights Revolution: Reconceiving the Regulatory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hygeson, N. M., Solberg, L. I., Asche, S. E., Fontaine, P., Pawlson, L. G., & Scholle, S. H. (2011).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homeness” and quality. *Health Services Research*, 47(1 Pt 1), 22-45.
- Wennekers, S., Van Wennekers, A., Thurik, R., & Reynolds, P. (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93-309.
- Zadeh, L. A. (1965). Fuzzy sets. *Information and Control*, 8(3), 338-353.

Configurational Effects of Regulatory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Choi Jongmi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onfigurations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a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Using 202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data from 51 countries, this study employ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no single condition constitutes a necessary condition for high TEA. Instead, high entrepreneurial activity emerges through multiple configurations of ecosystem conditions. The regulatory environment does not operate as an independent sufficient condition but is associated with high TEA when combined with favorable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Furthermore, the configurations linked to high TEA differ between high-income and non-high-income countries, suggesting that entrepreneurial activity is shaped by distinct national contexts. These findings show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interaction of ecosystem conditions rather than through regulatory reform alon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olicy mix approaches tailored to national contexts.

Key Words: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egulation, Entrepreneurial Ecosystem, Policy Mix